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22. 12.

한 국 은 행

한국은행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공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한 국 은 행
총재 이 창 용

<한국은행법>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 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 ②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③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차 례

<요약>	1
I. 기준금리 운용	1
II.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2
III. 금융안정 도모	3
IV.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5
V.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6

<참고>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1. 대외여건	7
2. 성장	8
3. 물가	9
4. 금융·외환시장	10
5. 금융시스템	11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요약 >

- ◆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
- ◆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파급영향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
- ◆ 금융·외환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
- ◆ CBDC 도입과 관련한 기술적·제도적 연구를 강화하고 다양한 활용 사례를 실험
- ◆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

I. 기준금리 운용

-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0%)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
 -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
- (높은 불확실성에 유의하여 운용) 이 과정에서 최종 기준금리 수준, 동 수준의 유지 기간 등은 물가 흐름과 함께 경기, 금융·외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

- 내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중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외 경기 둔화폭, 주요국 통화정책,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누증된 비용 상승압력의 전가 정도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Ⅱ.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경제전망,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

- 심층연구 수록, 시나리오 분석 등 **경제전망 보고서**의 내용을 **확충**

- 의결문 개선,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내용 내실화 등을 통해 정책결정 배경, 향후 정책방향 등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

— 주요국 포워드 가이드의 효과 등을 분석하고 **증장기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

- (공개시장운영 유효성 제고) 통화신용정책이 원활하게 파급될 수 있도록 **공개시장운영의 유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

-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대상증권 확대(1·2년물 → 1·2·3년물), 증권대차 담보증권 확대 등 **공개시장운영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구·분석 강화) **높아진 금리 수준 및 부채부담 하에서의 통화정책 파급효과, 물가 동학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분석을 강화

- 정책기조별·부문별 비선형적 파급 가능성 등 그간의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가계부채 누증 등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정책효과 제고 방안을 연구
- 팬데믹 이후 성장·물가간 관계, 추세 인플레이션 등 **물가 동학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점검
- 고빈도 미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 지표, 금융시장 유동성 지표 등을 신규 개발하는 등 **정책판단 참고지표** 확충을 지속

Ⅲ. 금융안정 도모

-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 안정 노력 지속) 경기 둔화, 국내외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부진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잠재위험 요인이 현재화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

- 시나리오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여 시장 불안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시행

— 현재 시행중인 조치*는 지원효과와 단기금융시장 회복 정도 등을 점검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

* 대출 적격담보증권·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의 확대, 단기금융시장안정 및 채안펀드 출자 금융기관 지원을 위한 RP매입 등

- 가계부채 리스크, 부동산 PF 대출 부실,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신용 리스크 증대 등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부동산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 등도 모색

-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정책당국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긴밀한 정책공조**를 지속
 - 한국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자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정책협력을 이어나갈 계획

- **(외환시장의 변동성 재확대 가능성에 대비) 국내 외환부문의 취약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환율의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안정화 조치를 통해 대응**
 -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간 상호연계성 확대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
 -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외환수급의 안정화 및 외환시장·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 대외충격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만기도래 **통화스왑*** 연장,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금융협력** 등을 추진
 - * 말레이시아(2.2일), 호주(2.5일) 및 인도네시아(3.5일)의 만기가 도래
 - IMF의 쿼타 일반검토(제16차*), 다자간 통화스왑(CMIM)의 유효성 제고 논의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
 - * 2023년중 증액여부, 회원국간 배분비율(증액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 **(기후변화 대응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경제 리스크 분석을 강화하고 정책적 대응 노력을 지속**
 - 기후리스크 평가를 위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하고 대내외 친환경 정책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 **지속가능금융*** 관련 조사·연구 등을 강화

* 민간의 온실가스배출 감소 및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금융' 이외에도 자원·에너지 효율 제고와 환경개선을 위한 상품·서비스 생산을 지원하는 금융을 포괄

- 외화자산 운용시 친환경 부문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여신제도(대출, 담보 등)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

IV.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 (CBDC 도입 기반 강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술적·제도적 이슈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대내외 협력을 강화

- 아울러 국내 유관기관, 민간부문, 국제기구 등과 함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실험

□ (지급결제 효율성 제고) 금융·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 인프라 개선 노력을 지속

-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은행 지급결제서비스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제고*

* 실시간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추진,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등

- 해외송금 비용을 낮추고 속도를 높이는 등 국가 간 지급서비스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국외 지급결제 인프라와의 연계를 추진

□ (지급결제 안전성 강화) 지급결제 혁신 흐름 속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시기능도 강화

- 빅테크 등 새로운 지급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급결제제도 안전성 확보 노력 지속

-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내외 규제·감시 논의에 적극 참여

V.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실효성 제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
 -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개선, 대출금리 경감, 지역중소기업 지원 현황 등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의 전반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프로그램 및 총한도 조정, 지역별 한도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

- (대출담보제도의 효율적 운용)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의 적정성 점검과 담보위험 관리체계 개선 노력을 지속
 - 한시적으로 확대된 적격담보증권의 유동성 및 가격 변동성 등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담보인정비율 조정 등을 검토

<참고>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1. 대외여건

◆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약화되겠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점차 둔화되겠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

□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지속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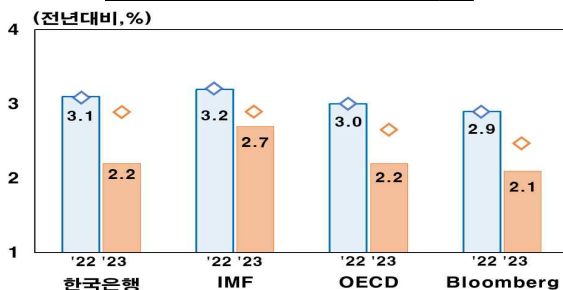
○ 미국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겠으며, 유로지역은 에너지 수급불안이 지속되면서 경기침체 가능성이 증대

—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 영향,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경기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

○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주요국 통화긴축 감속, 중국의 방역정책 완화 등으로 글로벌 경기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

□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주요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점차 낮아지겠지만, 높아진 에너지가격 등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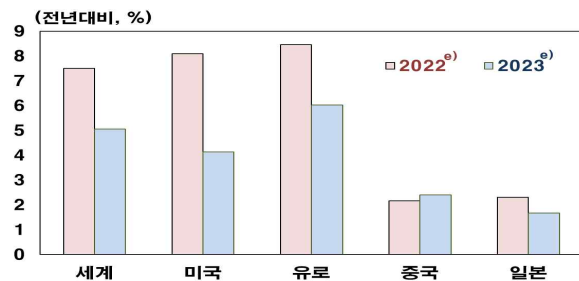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¹⁾²⁾



주: 1) 11월 전망 기준, 단 IMF는 10월 전망
2) ◇은 직전 전망(한국은행·Bloomberg 8월, IMF 7월, OECD 6월 기준)

자료: 각 기관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자료: Consensus Economics(2022.11월)

2. 성장

◆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취업자수도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성장) 국내경제는 상반기까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주로 기인하여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성장흐름을 보일 전망

○ 소비는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금리 상승 등으로 그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겠으며 수출과 투자는 주요국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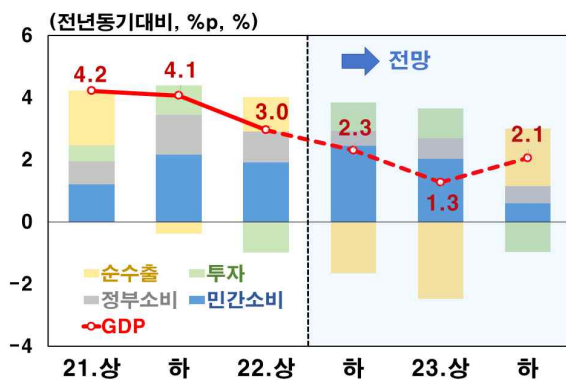
○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

○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지정학적 갈등 전개양상 및 중국 방역정책 변화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

□ (고용) 취업자수는 팬데믹 이후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가 사라지고 경기둔화의 영향이 나타나면서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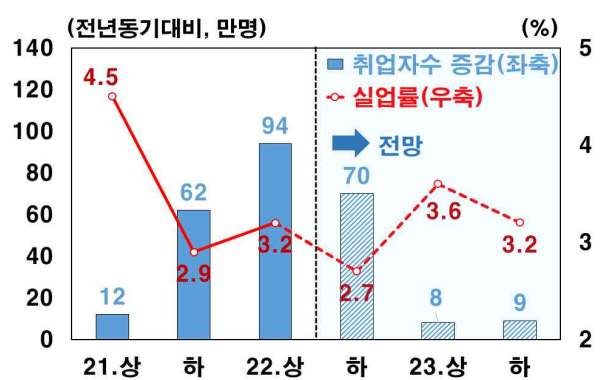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

GDP 성장률 전망



자료: 조사국

고용 전망



자료: 조사국

3. 물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 근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을 각각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2023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을,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은 2%대 후반을 각각 나타낼 것으로 예상

○ 공급요인의 기저효과,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지겠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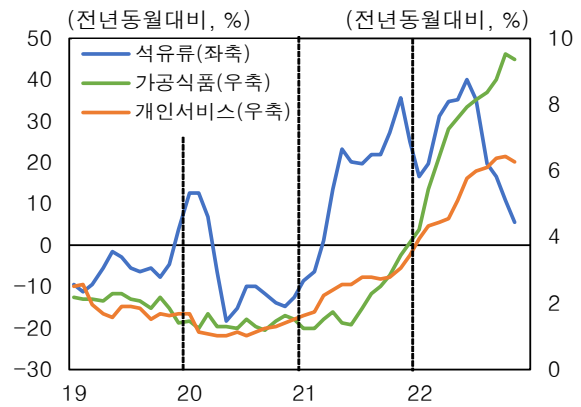
그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의 가격 전가(전기·가스요금, 가공식품, 근원품목 등) 등으로 내년 중에도 목표 수준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

□ 향후 물가경로 상에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 변동, 원/달러 환율 움직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물가 전망¹⁾



석유류, 가공식품 및 개인서비스 가격



주: 1) 2022년 상반기 이전은 실적치(분기) 기준 자료: 통계청
자료: 조사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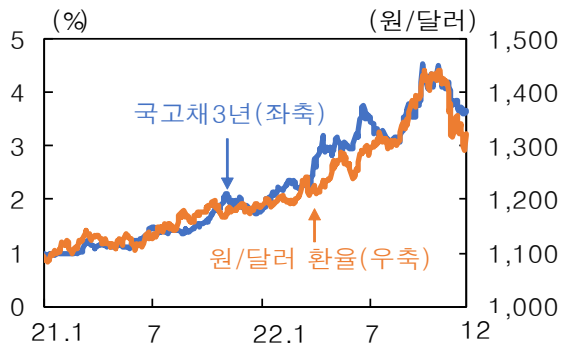
4. 금융·외환시장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높은 변동성이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지속 전망, 부동산 관련 자금시장의 신용경계감 등을 고려할 때 자본유출입과 주요 가격변수의 높은 변동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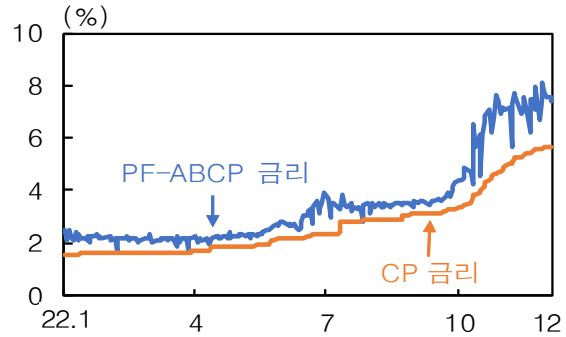
○ 부동산 경기 둔화폭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부동산 PF 대출 등 관련 자금시장 불안이 재심화될 가능성

국고채 금리 및 원/달러 환율



자료 : Bloomberg

일반 CP¹⁾ 및 PF-ABCP²⁾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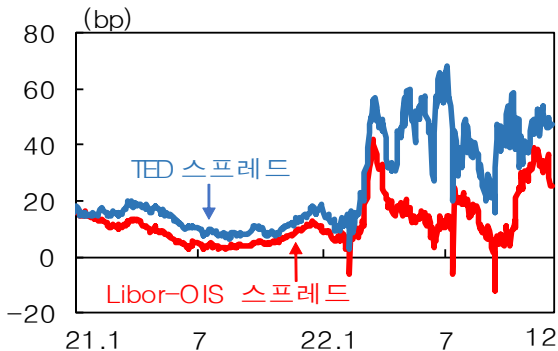
주: 1) A1등급, 91일물 수익률 기준

2) A1등급, 3개월물 발행·유통 금리 가중평균

자료: 금융투자협회, 금융시장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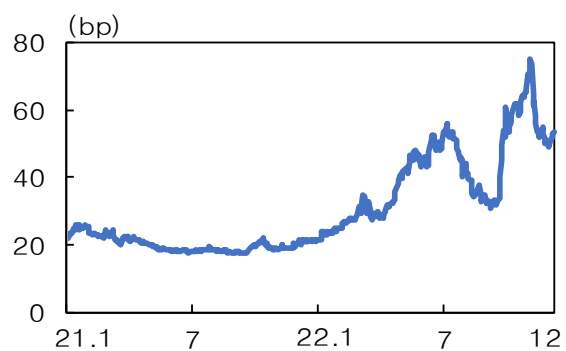
○ 글로벌 달러화 유동성 축소 지속, 주요국 경기 둔화폭 확대에 따른 글로벌 투자심리 회복 제약 등이 외환부문의 리스크 요인으로 상존

Libor-OIS 및 TED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한국 CDS 프리미엄¹⁾ 추이



주: 1) 5년물 기준

자료: Bloomberg

5. 금융시스템

◆ 금융시스템은 안정성을 유지하겠지만,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는 증대될 가능성

□ 금융시스템은 금융기관의 높은 자본비율* 등을 고려할 때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각 업권별 자본비율(22.3/4분기말 기준, %)

일반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	저축은행	생명보험	증권
16.7 (10.5)	8.4 (2.0)	17.8 (7~8)	12.9 (7.0)	200.1 (100)	708.4 (100)

주 : 1) 일반은행은 BIS기준 총자본비율, 상호금융은 순자본비율, 여신전문회사는 조정자기자본비율, 저축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 생명보험은 RBC비율, 증권사는 순자본비율 기준

2) ()내는 규제 비율

자료 : 각 기관 업무보고서

○ 다만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큰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부동산 경기 위축이 심화될 경우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우려*

* (증권회사) 부동산 PF 채무보증 이행 가능성, (여신전문회사) 여전채 발행 여건 악화 가능성,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에 따른 수신 이탈 가능성 등

○ 아울러 높은 대출금리, 자산가격 조정 등의 영향으로 취약부문의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

□ 한편 금융기관 대출은 부동산시장 부진,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금년에 비해 증가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

○ 가계대출은 주택거래 부진, 높은 금리수준 등으로 소폭 감소하고, 기업대출은 경기둔화 우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붙임)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한국은행법은 통화신용정책의 목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목표와 기본방향 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물가안정목표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핵심 목적인 물가안정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며,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이다.

○ **(중기적 운영 시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화신용정책 외에도 다양한 대내외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물가안정목표는 일시적·불규칙적 요인에 따른 물가변동, 통화신용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하여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 **(미래지향적 운영)** 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수준에 수렴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되,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위험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의 수렴 가능성은 물가 및 성장 전망과 더불어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 및 위험요인,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착 정도, 금융안정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신축적 운영)**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한다.

□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금융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통화신용정책 운영시 금융안정 상황을 신중히 고려한다.

○ **(금융시장 안정 노력)** 금융불안 발생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약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안정 및 중개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 **(금융불균형 유의)** 부채 누증 등 지속적인 금융불균형은 궁극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이에 유의한다.

—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공표하여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금융불균형의 과도한 누적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불균형 누적 억제를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